

UAE 650억달러 협력 합의... 방산·원전·AI 전방위 확대

강훈식 비서실장, 이진서 전담
장기적·전주기 협력 체계 전환
격주 단위 분야별 워킹그룹 운영

전략경제협력 특사 자격으로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 중인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양국 간 협력 강화 의지를 담은 이재명 대통령의 친서를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청와대는 양국이 방산 협력 등을 포함한 650억달러(약 92조8265억원) 이상의 협력사업 추진에 합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강 실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모하메드 대통령을 예방하고, 한-UAE 협력 강화에 대한 이 대통령의 뜻을 담긴 친서도 잘 전달하고 왔다”고 했다.

아울러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행정청장과 만나 모하메드 대통령의 방한을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하는 한편, 지난해 양국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 이행 방안도 논의했다고 전했다.



전략경제협력특사로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 중인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아부다비 행정청장과 회의에 앞서 악수하는 모습을 SNS에 공개했다. /강훈식 비서실장 SNS

이날 청와대에 따르면 강 실장은 대통령 특사로 과기정통부, 외교부, 산업통상부, 문화체육관광부, 해양수산부, 방위사업청, 우주항공청 등이 참여한 정부 합동 특사단을 이끌고 25일 UAE를 방문해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11월 이 대통령의 UAE 국민 방문과 올해 1월 UAE측 한국 특사인 칼둔 청장의 방한에 이은

것으로, 양국 정상이 공동선언을 통해 합의한 전략적 협력을 구체화하고 가시적 성과로 연결하기 위해 이뤄졌다.

청와대는 “강 실장이 이번 방문을 통해 칼둔 청장과 3차례에 걸친 밀도 있는 면담을 통해 650억달러 이상의 협력사업 추진에 합의했다”며 “원전, AI(인공지능), 첨단기술, 문화 등 분야에 대해서도 다음 정상회담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분야별 워킹그룹

을 구성하여 속도감 있게 후속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특히 강 실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방산 분야에서 350억달러 이상의 협력사업을 확정했다. 청와대는 “양국은 단순히 무기를 사고파는 관계에서 벗어나 설계부터 교육훈련, 유지보수에 이르기까지 방위산업 전(全)주기에서 협력하기로 하고, 이러한 협력원칙을 담은 ‘방산 협력 프레임워크 MOU’를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또 300억달러 규모의 양국 간 투자 협력도 새롭게 개편하기로 합의했다. 청와대는 “지난해 11월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앞으로 이어질 백년 동행을 위해 방산, AI, 원전, 문화 등 전략협력 분야를 설정함에 따라 투자 협력도 이에 맞춰 재편할 필요성이 생긴 것”이라며 “모하메드 대통령이 약속한 한국에 대한 300억달러 투자의 실질적 이행뿐 아니라 전략적 협력사업의 이행, 한국기업의 UAE 진출과 제3국 공동진출을 금융 측면에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청와대는 “원전 분야에서도 바라카 원전을 통해 쌓은 협력 경험을 토대로 전주기에 걸친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며 “양국은 핵연료 공급 사업, 원전 정비 역량 강화 사업, 원전 운영에 대한 AI 기술 접목 사업 등의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AI 등 전력수요 확대에 글로벌 원전 시장이 확대되고 있음에 주목해 공동진출 실행전략 수립을 위한 구체적인 협의에 조속히 착수하고 정상회담 계기에 공동진출 전략 로드맵을 채택하기로 합의했다”고 했다.

이외에도 양국은 AI, 첨단기술, 문화·교육·보건·의료·푸드 등의 분야에서도 정상회담 계기까지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확정하기로 하고 실무협의를 가속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국은 격주 단위 분야별 워킹그룹을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했고, 칼둔 청장이 3~4월쯤 재차 방한해 진전 상황 점검 및 후속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당정, 대미투자특별법 조속 처리 합의

산업통상부·민주당 당정협의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주장도

당정은 26일 대미투자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통해 대미 통상과 관련한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특히 빠르게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선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미투자특별법을 직권상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과 산업통상부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은 김원이 의원이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전했다.

대미투자특별법은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대미 투자 방안을 구체화한 법이다. 3500억달러(약 500조원) 규모 대미 투자를 집행할 한미전략투자기금 조성 과 의사 결정 체계, 국회 감독 절차, 환율 안정 장치 등이 담길 예정이다.

김원이 의원은 “대미투자특별법과 관련해 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제일 많았다”면서 “대미투자특별법을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이 8일 오후 전남 무안군 국립목포대 남악캠퍼스 컨벤션홀에서 열린 제5차 전남광주통합특별법 제정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빨리 통과시켜서 한국이 미국과의 신뢰관계와 약속을 지키려고 무던히 노력하고 있고, 실제 이행하고 있다고 (미국측을) 안심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가 오늘 논의의 핵심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미투자특별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한미 간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첫 걸음”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당정정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이른바 ‘상호관세’가 연방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은 직후인 지난

22일 점검회의에서도 대미투자특별법의 차질 없는 법안 처리에 뜻을 모은 바 있다.

또 김 의원은 “미 연방대법원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자존심이 상해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자존심을 세울 수 있는 본보기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그 (본보기) 케이스가 되면 안 된다”고 했다.

당초 여야는 대미투자특별법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 특위의 활동 시한인 내달 9일까지 법안을 합의처리할 계획이었으나 소위원회 구성·법안 상정을 진행하지 못한 채 법안 공청회만 마무리 했다. 민주당의 사법개혁법 추진 등에 국민의힘이 반발하면서 특위 활동에도 제동이 걸린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저쪽(국민의힘) 분들이 (특위 회의를) 안 열 생각”이라며 “개인 의견이지만 (이 법안은) 국회의장께서 직권상정을 해주셔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지금) 진짜 경제 전쟁 혹은 경제 전시(戰時) 아니겠느냐”고 덧붙였다.

/서예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부동산 공화국 해체, 넘지 못할 벽 아냐”

이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주제
“사회 모든 영역에서 정상화 진척”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주택 가격 하락 등에 대해 “방국적인 ‘부동산 공화국’ 해체도 결코 넘지 못할 벽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코스피 6000 돌파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개정안 통과에 대해선 “앞으로 ‘주가 누르기 방지법’ 같은 제도 개혁이 뒷받침되면 정상화 흐름도 더 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사회 모든 영역에서 국가 정상화가 조금씩 진척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도 정상화의 길을 가고 있다”며 “한때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가진 자산들이 저평가됐는데, 이제 조금씩 정상화 돼서 많이 개선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해야 될 일은 비정상을 정상화하고, 또 정상화를 넘어서서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 대통령은 “아직 우리 과제로는 국가 정상화가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제도 개혁이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어제(25일)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상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앞으로 ‘주가 누르기 방지법’ 같은 추가적인 제도 개혁이 뒷받침되면 이런 정상화의 흐름도 더 크게 될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한때 불가능해 보였던 자본시장 정상화가 현실이 되고 있는 것처럼, 방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을 해체하는 것 역시 결코 넘지 못할 벽은 아니다”라며 서울 지역의 집값 하락·주택매물 증가·전세값 상승률 둔화 등 최근 부동산 시장 흐름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이제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 생산적 금융으로의 자본대환을 한층 더 가속해야 된다”며 “비정상인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 국민 삶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모두의 경제’로 확실하게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자본시장의 정상화를 통해 부동산에 묶인 자금을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한다는 큰 그림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코스피 종가는 6308.17로, 한국증시 사상 최초 6300선을 돌파했다. 장중에는 6313.27까지 올랐다.

/서예진 기자

이 대통령 “우리의 가치는 평화·안정”

북한 대남 적대적 발표에 입장
靑 “남북 평화공존 위해 계속 노력”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북한의 대남 적대적 발표와 관련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는 평화와 안정”이라며 “대결과 전쟁을 향해 질주하던 과거를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북 간 지속적으로 쌓여온 불신을 하루아침에 해소할 수 없다며,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재차 밝혔다. 대북 유화 정책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점심 때 언론인들과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해 보니, 북한 발표 문안을 두고 질문이 꽤 많았다”고 언급했다.

앞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는 9차 노동당 대회 사업 총화 보고에서 “한국의 현 집권 권력이 겉으로 표방하는

유화적인 태도는 서투른 기만적이고 조작”이라며 “한국을 동족이라는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재명 정부의 대북 유화 정책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이다.

이어 미국에 대해선 “우리 국가의 현 지위(핵보유국)를 존중하며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한다면 우리도 미국과 좋게 지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북미 관계는 미국에게 달려 있다고 했다. 전형적인 ‘통미봉남(通美封南)’ 정책인 셈이다.

/서예진 기자